

도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총력

전북도·전북신보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지원 협약 체결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 대상



3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는 최정호 정무부지사,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창재 우리은행 부행장, 홍용웅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참석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가졌다.

전북도와 전북신보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 이하 전북신보)은 소상공인 금융으로 해소를 위해 협치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자금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신보는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기초지자체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관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물이 없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전북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전북신보에서 정부나 지자체 출연금만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기에 부족하자 새로운 해법으로 금융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북신보 보증재원으로 출연금을 확보하고, 전북신보는 출연금을 기반으로 도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하고 전북도는 이자경감을 위해 이차보전을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 현재까지 6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북신보 출연금 42억원을 확보하고 1,180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농협과 전북은행으로부터 각 10억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5억원 등 4개 금융기관 총 30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일자리자금으로 1,000억원을, 6월에는 신한은행으로 2억원의 출연금을 확보 30억원의 특례보증을 시행 중에 있다.

금융기관 특례보증을 받는 업체는 전라북도에서 최대 연 1.5%의 수준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시행을 주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에서 10억원을 전북신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전북신보는

출연금의 15배수인 150억원을 우리은행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지원한다

특히 우리은행과의 특례보증 협약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상품에 비해 업력제한을 완화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실직자 또는 실직자 가족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업체당 7천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되며, 최장 8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평균 연 1.5% 수준이었던 보증수수료도 연 1%로 우대 적용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더욱더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신용등급 7등급 이상(1~7등급)의 소상공인,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한국GM 군산공장 실

직자 또는 실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를 통해 도내 5,500개 소상공인 등 업체에게 특례보증 지원 혜택이 갈 것으로 보여진다.

도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자금 확보에 노력했다."며 "지속적인 포용적 금융 강화를 통해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 경제회복 및 동반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자금이 대한 애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업력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중부세 개편 권고안 확정

세율·공정시장가액 인상

재정개혁특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정부에 제출

중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최고 2%에서 2.5%로 인상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3%, 별도합산토지분 세율도 최대 0.9%까지 오른다. 이로써 중부세 대상은 34만6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도 낮춰 과세 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내년부터 축소 또는 폐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 중 조세분야 권고안은 ▲중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

고세율이 0.7%에서 0.9%로 오른다.

중부세 개편 권고안의 대상 인원은 주택 보유자 27만4000명, 종합합산토지 6만7000명, 별도합산토지 8000명 등 총 34만6000명이다.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수의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방안도 권고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 이는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하고 다른 소

중부세 대상 34만6000명, 예상 세수효과 1조1000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 → 1000만원 ↓

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발소비에 세 개편 등 4건으로 구성됐다.

가장 관심이 큰 권고안은 중부세 개편이다. 2008년 개편 이후 10년 만에 개편을 앞두고 있어서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자산 가격 확대로 부의 불평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권고안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에 10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포인트 인상한다. 이로써 현행 최고 2% 세율이 최대 2.5%까지 오른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은 정부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린다. 이에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로써 최

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게 목적이다.

소수의견으로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안도 마련했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를 대상으로 과세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의 소형주택 특례, 기본공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을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예산분야에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5건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뉴시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추가 신청 접수

전주시, 5억원 투입...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추진 13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전주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을 고쳐주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을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5억원을 투입해 도배와 장판, 지붕개량, 창호교체, 화장실 수리, 보일러 교체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적 배려가 필

요한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소파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는 등 주거약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장애예방 측면의 주택개보수 지원내용도 확충·시행하고 있다.

개보수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거복지과(063-281-5247)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총 110가구에 대한 주택 보수를 완료, 전체 선정가구 대비 약 61.1%의 진도율을 보였다.

또한, 장마철에 대비 지붕과 창호 교체 등 수리가 완료된 가구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